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성재민*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은 2018년에 비해 양호한 취업자 수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30~50대 고용둔화는 지속되는 등 총량과 부문 사이 신호가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이 빠르게 하향둔화되던 지난해 상황은 올해 들어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둔화 영향을 받고 있어 여전히 고용 둔화된 모습 자체는 지속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총량으로 볼 때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지난해 고용증가폭이 작았던 기저효과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인구증가 둔화 흐름이 2018년에 강하게 나타났으나 올해는 2018년에 비해 인구증가폭이 커진 상태이며 특히 15~64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노인일자리사업 개시 시점이 1개월 앞당겨져 2, 3월 고령취업자 증가폭이 컸고, 일자리사업 규모 또한 커져서 4월 이후로도 고용증가폭 개선에 역할하고 있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업종으로 보면 제조업 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숙박음식점업 같은 일부 업종에서 고용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총량적 면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커지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상황이 좋았던 25~29세는 올해 들어 둔화 국면으로 바뀌었다. 특히 2017년부터 2년간 고용률이 개선되었던 4년제 대졸자 취업지표가 나빠지고 있는데, 경기둔화가 길어지면서 청년의 신규취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점과 함께 업종으로 보아도 청년선호업종인 제조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에서 고용둔화가 나타나고 있어 올해는 20대 후반 고용상황이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40대 고용률 하락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업종으로 보면 주로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자영업자와 임시직)에서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0대와 50대는 최근 들어 고용률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 좋은 흐름을 보일 때와 비교하면 현재도 둔화 흐름이라고 평가해야 하며, 특히 남성에 한정할 경우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작년과 반대로 고용주는 감소 국면에 진입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전환했다는 특징이 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증가했던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seongjm@kli.re.kr).

에서 감소하고 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래 경기침체, 노동시장 침체상황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당분간 증가의 지속가능성 자체는 높은 편이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금융위기 이래 한 해 증가하고 한 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당분간 감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증가폭이 컸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지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조업은 감소를 이어가고 있으며, 제조업은 특히 지난해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6월에도 감소를 이어가고 있어 하반기에도 감소 가능성이 커진 상태이다. 서비스업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상당히 커졌으나, 2018년 2분기와 2019년 2분기 서비스업 고용증감 흐름을 비교해보면, 숙박음식점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정도가 실질적인 증가 흐름이고, 나머지 업종의 증가나 감소는 상당부분 기저효과와 관련(금융보험, 공공행정국방, 부동산, 교육서비스 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숙박음식점업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증가에 상당부분 힘입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청년선호업종임에도 정작 청년 유입은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는 한계(신규채용이 아니라 이직 둔화 같은 현상의 반영일 가능성 없지 않음)가 존재한다. 예술·스포츠는 지난해에 이어 국민계정 가계최종소비지출 중 오락문화가 지난해에 이어 지출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종합적으로 보면, 서비스업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용개선을 개선 흐름을 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아쉬운 모습이다.

상반기에 나타난 주요 흐름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만 명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모습이 노동시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 미중 무역마찰의 향후 악화 여부, 일본의 수출규제는 제조업 고용 회복가능성을 낮추며, 세계경제의 둔화 흐름도 취업자 수 증가폭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주요국의 확장적인 경제운영이나 국민계정 민간소비지출 흐름으로 볼 때 실질 지출액 증가폭 둔화 요인이 주로 임료 수도광열, 해외소비, 교통(자동차 구매 포함)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외국인 유입 호전과 관련이 있을 숙박음식점업이나 오락문화, 의류신발 같은 부문은 지출액 증가폭이 최근 몇 년 사이 비교해 볼 때 좋은 흐름이어서 현재의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면 서비스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개선 흐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주력연령대와 함께 청년, 특히 20대 후반이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청년을 비롯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집행과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실행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인력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근로조건, 근로환경 때문에 R&D 인력 같은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측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도 급여 인상이나 인사관리체계 마련, 여타의 근로조건 개선 없이 필요한 인력을 뽑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현재의 일시적 어려움을 쉽게 넘길 수 있게 중소기업의 R&D 인력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력수급에 도움을 주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차제에 날이 갈수록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타격을 입기 쉽다는 점을 감안해 자유무역협정에만 적용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무역분쟁 시에도 적용할 수 있게 확대하고, 관련된 고용보조 정책집행 시 타격이 실현된 기업뿐 아니라 예상되는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 제도의 적시성을 높여주는 개편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KLI**